

한·미 FTA 비준 왜 필요한가?

민 동 석*

I. 서 언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진전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 통상 환경은 지역주의(Regionalism)에 대한 의존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확산은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에서 시작된 다자통상 체제를 변모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FTA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중국 등이 FTA 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FTA 체결의 목적도 관세철폐를 통한 시장접근성 확대에서 천연자원 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10년 2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268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이 발효되었고¹⁾, 이를 통한 교역이 전 세계 교역의 50%를 훨씬 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확산은 리먼 쇼크 이후의 전 세계 금융시장 혼란과 경기불

황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 현실에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주요 선진국들의 동반 불황으로 한국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국내 내수시장 위축으로 2008년 무역의존도가 사상 처음으로 92.3%를 기록하였다.²⁾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의존 현상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이번 경제위기는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가진 통상국가라는 점을 각인시켜 주었고, FTA를 통한 안전한 세계시장의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편, 한국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공세적인 지역주의로 방향 전환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2년 10월 한·칠레 FTA의 타결을 필두로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한·미 FTA, 한·인도 FTA, 한·EU FTA 등을 타결하였고, 캐나다, 멕시코, 페루,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과 는 현재 협상 진행중이다. 중국, 일본, 러

* 외교역량평가단장, 한·미 FTA 농업협상 고위급대표(2007년)

시아 등과는 협상 개시를 위한 공동연구 단계에 있다. 이상의 FTA가 모두 체결·발효될 경우, FTA를 통한 한국의 전체 교역의 86.5%가 FTA라는 경제 고속도로를 싱싱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3억의 인구와 전 세계 총생산의 23.4%(14.3조달러)³⁾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미국 시장을 겨냥한 한·미 FTA라는 경제 고속도로로의 진입은 양국이 처한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 난관으로 인해 녹녹치 않아 보인다.

Ⅱ. 기로에 선 한·미 FTA

한국과 미국은 2007년 4월 협상 타결, 6월 정식 서명한 한·미 FTA를 3년이 가깝게 묵혀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2008년 10월 8일 국회에 제출된 후, 2009년 4월 22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본회의 계류중이다. 우리 국회는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충분한 보완대책이 마련되고, 미국의 비준 의지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비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 의회 인준도 미국의 국내 사정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미국 정부도 한·미 FTA가 갖는 경제적·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최근 한·미 FTA 진전 의지를 재확인 한 바 있다.⁴⁾ 그러나, 경기침체, 의료보험 개혁, 금융개혁, 기후변화 등과 같은 현안 과제, 11월 중간선거 일정 등 다양한 변수들이 미국내 한·미 FTA 비준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최근의 도요타 리콜 사태는 미국 자동차 업

계의 보호주의를 강화시키고 있어 자동차 분야에서의 이해균형 없이는 한·미 FTA 비준이 어렵다는 미국의 입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제반의 여건들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한·미 FTA 비준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올 11월 중간선거 이전에는 미국내 비준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한·미 양국은 한·미 FTA 타결 이후 4년이 넘는 세월을 아무런 소득 없이 보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그냥 한·미 FTA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히고 국격을 격상시키는 기회의 발판으로 만들 것인가?,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미 FTA를 택했고,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상 타결’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평가한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왜 한·미 FTA가 발효되어야 하는지를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Ⅲ. 한·미 FTA 비준의 필요성

1. 한국 경제의 생존을 위한 선택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내수 시장이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사상 처음 90%를 넘어 92.3%를 기록하였다. 연간 총수출액과 수입액이 국민총생산의 90%를 넘어선 것이다. 이

수치는 우리에게 무역은 국가경제의 생활이 달려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한·미 FTA 시작 당시인 2006년 무역의존도가 66.7%인 것에 비하면 상황은 더 나빠졌고 무역의 중요성은 그때보다 더 커졌다.⁵⁾ 우리는 싫든 좋든 무역지향적인 성장을 포기할 수 없는 나라다. 인구 5천만 남짓의 내수 시장만으로는 세계 유수의 공업국들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역을 통한 시장 개척과 확보는 한국의 생존이 걸린 과제인 것이다.

여기서, 수출만이 살 길인 우리는 지난 5년간의 한·칠레 FTA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칠레 FTA의 타결은 2002년 10월이었지만,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는 농민들의 반발로 2004년 2월에 겨우 이루어졌다. 2년 반이 넘는 시간을 허비한 것이었다. 당시 칠레는 우리와 협상을 진행시키면서 동시에 다른 여러 나라들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결과 미국, EU 등을 비롯한 9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이뿐만 아니라 2006년 10월부터는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2007년 9월에는 일본과의 특혜무역협정도 효력을 갖게 되었다. 즉, 우리 기업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 업체들이 우리와 동등한 조건으로 칠레 시장에서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발효초기에 누렸던 특혜관세 효과가 반감된 것은 물론이고, 시장 선점효과, 즉 경쟁업체들을 따돌릴 수 있는 기간 역시 그만큼 줄어들었던 것이다.

2007년 미국 시장에서 중국이 16.1%, 일본이 6.6%, 독일이 4.6%, 한국이

2.3%를 차지하였다.⁶⁾ 우리나라보다 점유율이 높은 국가는 1위인 중국에 이어 캐나다, 멕시코, 일본, 독일, 영국 순으로 우리나라는 7위의 수출국이다. 미국의 전체 수입시장 규모는 약 2조 1천억 달러에 달하며, 전 세계 수입시장 중 12.5%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다. 비록 현재의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미 수출의 둔화세는 세계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므로, 미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나날이 증가하는 기회비용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있어왔던 수많은 정치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성에 대해서는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높은 경제적 이익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 워싱턴 DC 소재의 페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도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007년 4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후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경제적인 효과는 국내총생산(GDP) 6% 증가, 대미 무역수지 200억달러 흑자, 34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요약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될수록 미국 시장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 수입증대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로 인한 GDP 증대효과 등의 실현이 지연되는 등 상당한 기회비용의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제기하였다.⁷⁾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 FTA 비준 지연으로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기회비용이 연간 15조 2천억 원(실질 GDP 성장기회 연간 8조 원, 후생증대 연간 2조 원, 외국인 투자유치 약 3조 원, 무역수지 약 2조 2천억 원 등)에 달한다고 추정하였다.⁸⁾

한·미 FTA 비준 지연으로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수치만이 아닐 것이다. 당초 목표였던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에 따른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대외신인도 상승에 따른 ‘Korea Discount’의 극복,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미국의 자본·기술을 활용한 미래기술의 성장산업화 등 지금 현재 우리는 많은 기회와 이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처럼 협정문이 양국에 유익하게 만들어 젖어도 발효가 안 되면 소용없다. 수출시장을 서로 키워주고 전략적 동맹관계를 더 단단하게 할 기회를 만들고도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은 두 나라의 불행이다.

3. 보호주의의 극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의 경제동맹 차원에 더해 반보호무역주의의 한 표상으로도 새삼 주목되고 있다.

2007년 12월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곳곳에서 보호주의 망령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도 보호무역주의 배경이 최대의 의제로 선정되었고, 추가 보호주의 방지는 물론이고 이미 시행중인 조치도 철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늘 반개방적 주장이나 극단적인 보호주의 수단 도입이 거론되곤 한다. 경제난으로 인해 국민의 불만이 커지면 정치인들은 이러한 불만을 수입품과 수출국에 돌리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그 결과 보호주의가 나타나게 된다. 보호주의적 제한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합당한 수입규제도 있지만, 정치적 고려로 인한 보호주의는 무리한 조치가 많아 대부분 상대국의 보복을 초래하게 된다.

지난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보호주의 배경에 많은 국가들이 동의한 것은 이러한 연쇄적인 보호주의의 대두로 세계 무역환경의 악화와 이로 인한 세계경제 회복 지연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미 민주당이 의회다수당이 된 이후 2007년 5월 10일 의회와 행정부의 합의로 수입된 미국의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은 보호주의 성향을 띤 것으로 무역자유화의 전제조건이 되는 핵심 근로기준, 환경, 의약품, 정부조달, 항만보안, 투자, 그리고 근로자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도 작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9개 부처가 4조 위안 경기부양책을 집행하면서 정부 발주 공사에 자국산을 구매하라는 “Buy China” 지침을 내린바 있다. 최근의 도요타 사태도 보호주의의 연장이라는 입장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미국의 이러한 보호주의가 한국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칠까봐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외의존도가 90%를 넘는 한국에게 보호무역주의는 재앙인 셈이다. FTA를 통해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를 뛰어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미국내 보호주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FTA 이행이다. FTA에서는 협정 체결시점부터 무역방해적인 조치의 도입을 금지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4. 한국의 FTA 협상력 제고

한·미 FTA가 발효되면 경제규모면에서 EU(15.3조불), NAFTA(15.1조불)에 이어 세계 3위(14.1조불)의 지역시장(Regional market)이 될 뿐만 아니라⁹⁾, 우리가 전 세계적 FTA 체결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향후 여타 FTA 협상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경쟁국들은 우리나라의 FTA 협상 추이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한·미 FTA 비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국가는 한국 시장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EU, 중국, 일본 등일 것이다. 한국과의 FTA에 소극적이었던 EU가 적극적인 태도로 입장 전환을 하고 작년 협상을 타결하기까지 한·미 FTA의 촉매 역할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 산업계는 이미 일본보다 먼저 미국과의 FTA를 타결한 것에 대해 부러움을 표시한 바 있다. 중국은 이미 1년 예정으로 한국과의 산관학 FTA 연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한·미 FTA가 비준된다면, 중국은 한국과의 FTA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며, 농업의 민감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수출을 둘러싸고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

는 호주, 뉴질랜드 등의 협상 타결에 대한 열망을 높여 협상에서의 우리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5. 우리 농업의 체질강화와 도약의 기회

농업이 한국 통상의 역사에서 상당히 큰 위치를 차지해 왔고, 또 현재도 그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우리의 정서, “영세성”을 지닌 산업구조, “식량안보”의 필요성, “낮은 가격경쟁력”이라는 우리의 취약점, 정부의 지원과 연계된 “정치성” 등으로 대외개방에 있어 언제나 큰 장벽이 되어왔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개방’이 우리 농정의 화두로 처음 등장한 이래 UR 농업협상, 2004년 쌀협상, 한·칠레, 한·미 FTA 타결 등을 겪어오면서 한국 농업에서 개방은 이미 ‘구조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농산물 개방은 우리 농업에 대해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오고 있었다. 물론, 역기능이라고 하면 개방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위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매년 개방의 파고가 밀려올 때마다 우리 농업은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우세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개방이 시작된 이래 농업의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지만, 우리 농업의 체질은 조금씩 강화되었다.

한편, 개방이 언제나 역기능만을 담당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 정부는 농업이 직면한 개방의 파고에 대응하기 위해

1986년 농어촌종합대책, 1987년 농어촌 경제활성화종합대책, 1989년 농어촌발전종합대책, 1991년 42조원 투자계획, 1994년 농어촌발전 및 농정개혁추진방안, 1998년 농업·농촌발전계획, 2004년 농업·농촌종합대책 등 다양한 대응책을 구사했고, 이를 통해 소득안정, 생산기반 확대, 농촌생활개선, 구조조정, 복지향상 등 우리 농정의 진화를 도모해왔다.¹⁰⁾ 즉,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개방의 압력은 우리 내부의 체질을 개선하고 도약하기 위한 순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한·미 FTA 농업협상 결과는 개방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최대화한다는 목표 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당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쌀을 관세양허에서 제외함으로써 우리 농업생산의 1/4를 한·미 FTA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하였다. 쇠고기는 40% 관세를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하면서, 수입이 갑자기 늘어날 때 농산물 셰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였고, 오렌지는 제주도 감귤이 주로 생산되는 9월부터 2월까지 수확기에 현재 관세 50%를 계속 유지하고 비수확기에는 관세를 7년에 걸쳐 철폐해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타 민감 농산물에 대해 현행관세 유지, 세번분리, 계절관세, 비선형 철폐 등 다양한 양허방식을 도입하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아울러, 고관세 품목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 셰이프가드를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개도국우대 수출보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과, 배, 김치 등의 수출 물류비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한·미 FTA 타결 직후 국내 언론에는 “명품채소”, “명품과일” 등 농민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비춰지기 시작했다. UR 협상, 쌀 협상 당시 전국의 농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며 저항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었다. 최근 우리 농업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우리 한식의 세계화와 함께, 농식품의 100만 불 수출을 목표로 뛰고 있다.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는 약 4조 달러 수준으로, 자동차(1조 6천억 달러) 시장규모의 2배가 넘고, 정보기술(2조 8천억 달러) 시장규모의 1.5배 이상 크다.¹¹⁾ 이제, 우리 농업이 바라봐야 할 시장은 40조원의 한국 식품시장이 아니라 4천조 원이 넘는 규모를 가진 세계 식품시장이어야 한다. 특히, 한국 주변에는 전 세계 식품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장속도가 빠른 중국, 인도, 러시아, 일본 등의 시장이 위치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농수산식품은 명실상부한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미 FTA 비준과 발효는 세계를 향해 막 도약하기 시작한 우리 농업에 긍정적인 자극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IV. 결 언

일각에서는 한·미 FTA가 농업 등 취약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비준을 반대하고 있다. 물론, 모든 분야가 다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국내 대책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한·칠레 FTA의 지난 5년간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한 이후 한국의 전 세계 연평균 교역 증가율은 14.8%를 기록한 반면, 칠레와의 교역은 두 배 가까운 18.3%씩 늘어났다. 연평균 대 칠레 수출 증가율(43.9%)이 수입증가율(20.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간 1억 달러 이상 무역수지 흑자가 나타난 부문은 자동차 및 부품 분야(7억 달러), 일반기계(2억 1천만 달러), 석유화학(1억 4천만 달러), 가전기기(1억 2천만 달러)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우려했던 농업 분야 피해도 당초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다. 칠레산 포도와 직접 경쟁하는 시설포도의 재배 면적은 협정 발효 이전보다 오히려 증가하였고¹²⁾,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 사육두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산지가격은 발효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¹³⁾

필자는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미국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자동차 이슈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경청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회피만이 능사가 아님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교하게 짜여진 한·미 FTA의 이해균형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한·EU FTA 조기 비준이 필요하다. 한국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EU와의 FTA의 발효는 미 의회를 움직이기에 충분한 카드가 될 것으로 본다.

셋째, 현재 진행중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의 FTA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한국의 농산물 시장을 둘러싸고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로, 이들과의 FTA 체결 및 발효는 미 농업계의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절박함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미국 정부가 한·미 FTA 비준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촉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한·미 FTA 비준이 미국의 “Asia Engagement”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미국의 자유무역에 대한 확신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미 FTA로 인해 이익을 얻는 미국 업체들이 의회 비준 촉구를 위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회, 관련 경제단체 등의 민간 차원에서 미 업체를 만나 설득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최근 론 커크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자국의 경제불황을 타개하는 방안의 하나로 한·미 FTA 비준을 들고 있다. 비록, 자동차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되나, 비준에 대한 미정부의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긍정적인 기류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과 같은 산업에 대한 외교적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각 분야에 대해 소

관 부처들이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우리 외교의 역할은 미미한 상황이다. 전 세계 공관망을 활용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세일즈 외교”를 적극적으로 농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최근 추진하고 있는 한식 세계화는 우리 재외 공관의 역할이 많이 필요한 분야이며, 이런 외교적 노력이 국내 농식자재의 수출을 촉진하고, 농업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법정 스님의 책 제목인 “일기일회(一期一會)”를 언급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말은 원래 다도(茶道)에서 나온 말로 우려낸 차의 맛은 오직 그때 그 자리에서 단 한 번의 고유한 향과 빛깔을 지닌다는 의미와 일생에 단 한 번이라는 생각으로 차를 대접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어찌면, 한·미 FTA도 우리에게 일생의 단 한 번의 기회일지도

모르며, 지금의 고유한 향과 빛깔을 잃어버리면 그 가치가 퇴색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2007년 12월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내수시장의 침체, 사상 최대 실업률 갱신 등 불황에 힘겨워하면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의 산업구조와 여건을 감안할 때, 한·미 FTA는 하나의 대안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한·미 FTA가 가진 많은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양국 의회의 비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선비준만 기다리기 보다는 우리가 먼저 비준 노력을 보임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100여 년 전 역사의 교훈을 잊고 또 다시 변화를 강요당하겠는가 아니면 우리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는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외교**

- 1) <http://rtais.wto.org/UI/PublicConsultPreDefReports.aspx>
- 2)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 3) "FIA 세상" 2009년 12월호 p. 7 인용
- 4) 오바마 대통령은 1월 27일 연두교서에서 한국 등 핵심 파트너들과의 무역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하면서 FTA 진전 의지를 시사한 데 이어("We will strengthen our trade relations in Asea and with key partners like South Korea, Panama, and Colombia."), 1월 29일 하원 공화당 행사에서 한·EU FTA 서명시 EU의 한국 시장 선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 FTA 진전 의지를 재차 강조하였다.("What is also true is that the European Union is about to sign a trade agreement with South Korea, which means right at the moment when they start opening up their markets, the Europeans might get in there before we do.") 또한,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2월 초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할 필요성이 있으며, 강력한 무역협정을 통해 수출을 증대시키겠다는 강한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 5) 기획재정부 보도참고 자료 참조, 기획재정부는 무역의존도 상승의 원인으로 환율상승, 유가상승, 순수출 감소, 내수변동 등을 꼽고 있다.
- 6) <http://fta.korea.kr/>
- 7) "한미 FTA 조기 비준이 필요한 10가지 이유", 대한상공회의소, 2007.7
- 8) "한국디지털뉴스", 2009년 6월 30일자 기사 인용
- 9) 기준년도 : 2006년
- 10) "한국 농업경제학 50년의 회고와 전망", 2008년, 한국 농업경제학회 편저 참고
- 11) 기준년도 : 2004년, 참고로, 다국적 컨설팅업체인 AT커니는 세계 식품산업 규모를 2010년에 약4,285조원, 2020년에는 6,200조원으로 전망했다.("농식품이 희망이다! 왜, 농식품인가?", 농민신문, 2008년 4월 14일)
- 12) 2003년 : 1,641ha → 2008년 : 1,824ha("한-칠레 FTA 발효 5년 평가", 한국무역협회, 2009년 3월)
- 13) 2003년 : 9,231천두 → 2008년 : 9,087천두("한-칠레 FTA 발효 5년 평가", 한국무역협회, 2009년 3월)